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효과

발효 내용과 의미

- (주요 내용) 이번 조치는 1999년 9월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베를린)에서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대가로 발표한 사항의 약속 이행임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무역과 투자, 원조(인도적 지원 예외)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봉쇄 조치로, 수출관리법, 적성국 교역법 등 6개 국내법과 국제무기거래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발효된 내용은 ▶전략 물자를 제외한 일반 상품의 수출입 허용을 비롯하여, ▶농업·광업, 제조업과 도로·항만·관광 등에 대한 투자 ▶미국인의 북한인에 대한 송금 허용 ▶상업용 항공기 운항과 선박·항공기에 의한 일반 화물의 대북 운송 허용 등임
- (의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평가로 해석
 - 발효 시점과 관련하여,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발표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단계적 방안(페리 프로세스)”의 순항,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평가와 한미일 공조 유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북미 양측의 의지 등이 종합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제재 완화 폭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개인 여행 등 극히 제한적 수준의 1차 완화 조치(1995. 1. 20)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서, 무역·투자·수송 등 북한의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도 남북공동선언 제4항의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합의 내용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됨

정치·외교적 효과 : 대서방 전방위 외교에 긍정적 효과

- (정치·외교적)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대서방 전방위 외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며,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탄력을 제공
 - 북한은 대외 이미지와 신용 제고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본격적인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서방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과 북일 수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무부는 ‘불량국가(Rouge State)’를 ‘우려대상국(State of Concern)’으로 명칭 변경

했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북 투자나 지원을 위해 美의회 지도자를 상대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설득·협조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음

경제적 효과 :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

- (단기) 대미 수출 시장 개방과 투자 허용, 북미 해상·항공 운송 허용으로 외화 획득과 서방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나, 투자 환경 미비로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임
 - 테러 지원국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위반국에 대한 제재는 남아있어 당분간 防産 물자와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고, 대미 수출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일반특혜관세(GSP)의 제한으로 가격 경쟁력에 열세에 있음
 - 특히, 북한산은 미국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이 열세에 있는데다가, 높은 관세율로 인해 중국 상품에 비해 최소 30~50% 이상의 수출 단가(FOB 기준) 절감없이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미국내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 지지 불허, 북한의 구매력 부족과 열악한 SOC 시설 등으로 투자 유치 효과도 미미할 것임
 - 다만, 곡물이나 북한산 광물(마그네사이트나 철광석 등), 음식료품과 섬유류를 중심으로 구상무역 혹은 3각무역을 통한 소규모 무역은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투자 부문에서는 통신, 전력 등 선점 효과가 높은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유럽 상공인들의 본격적인 시장 조사가 예상됨
- (중장기)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경협 확대로 대북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북한의 개혁·개방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서방의 대북 투자와 경제 지원이 확대될 전망
 - 경제제재 완화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인 만큼, 페리 프로세스의 단계별 이행 전략에 따라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 조치도 조만간 확대될 전망
 - 이는 일본과 유럽 등 여타 서방국과의 대북 투자와 경제 지원 확대, 북한의 미국내 금융 자산(최대 2,500만 달러 추정) 동결 해제와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으로 연결되어 북한 경제 회복과 투자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외국기업과 남한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 특히 북일 관계 개선은 북한경제 회복의 최대 자금원이 될 청구권 자금(50~100억 달러 추정) 협상과도 연결되어,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SOC 건설 재원 마련에도 탄력을 더해 줄 것으로 예상됨

(홍순직 연구위원 sjhong@hri.co.kr ☎ 3669-4082)